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충남의 전략 방향

홍원표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책임연구원, wonpio@cni.re.kr

CONTENTS

1.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내용과 의의
2. 한반도 신경제 구상 관련 주요 동향
3. 한반도 신경제 구상 관련 충남의 딜레마
4. 신경제 구상과 충남의 전략방향
5. 정책 제언

요약

-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그랜드 플랜으로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함
-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이를 둘러싼 주변국가들의 협의는 충남의 미래에 구조적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남은 이에 걸맞은 담대한 비전과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 현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70여년의 남북분단체제 전환, 동아시아 초국 경 경제 네트워크 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전환이며, 이는 충남의 미래를 규정하는 구조적 환경 변화임
- 한반도 신경제 구상 관련하여 충남은 ① 충남 지위와 역할의 모호함, ② 대외 교역 거점 미비, ③ 남북경협 경험 적음, ④ 장기적으로 한반도 경제권 속 충남 지위의 불확실성 등이 과제로 제기됨
- 충남은 동아시아 초국경 네트워크에서 중심 지위 확보를 목표로 우선 대외 교역 거점 구축, 태안반도~인천공항~해주(개성) 해저터널 인프라 건설, 북한과의 파트너십 확보에 매진해야 함
- 태안반도를 기착점으로 하는 한·중 해저터널 건설은 태안반도를 동아시아 초국경 교통 네트워크의 연결점으로 확립하는 관건이므로 지속적인 공론화가 필요함

01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내용과 의의

-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그랜드 플랜으로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분단으로 제한된 경제 영토를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은 물론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한다는 구상(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 남북한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정전략 기조의 핵심적인 구상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 성장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주도한다는 구상
-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3대 경제협력 벨트 구축과 하나의 시장 협력을 주요 뼈대로 하고 있음
 - 3대 경제협력 벨트는 환동해경제권(부산~나선~블라디보스토크~동북3성~니가타), 환횡해경제권(목포 ~인천~개성~해주~남포~신의주~동북3성~상해), 접경지역 평화벨트를 연결하는 H자 구상(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 하나의 시장 협력이란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 시 남북 시장협력을 단계적으로 실행하자는 의미



출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7)

[그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 (한동해경제벨트) 한·러 경제협력과 남·북·러 경제협력의 투트랙 분리 추진
 - 금강산 관광권, 동북아 에너지권, 단천-함흥 자원권, 초국경 산업권, 대륙 철도권, 해양 협력권, 일본 연계권 등으로 복합물류, 관광, (신재생)에너지, 농수산식품, 자원 중심
 - 정부의 역점 사항은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운송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과 북극항로 개척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별
 - 나진-하산 노선의 회복을 통해 나진에서 국내로 운반하는 방안 이외에도 러시아 항구에서 LNG선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로 반입하는 노선 모색 중
- (한황해경제벨트) 인천-개성-해주 소삼각의 협력을 중심으로 북한을 열고 중국으로 연결 모색
 - 첨단 제조업과 물류 중심인 환황해 경제벨트는 개성공단권, 서해경제권, 고속교통권, 황해 에너지권, 항만 거점권 등으로 구성

- 경의선→경원선→평라선으로 한반도 철도연결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아 철도(TCR/TSR)를 연결하는 물류망 건설 포함
- 환동해경제벨트와 달리 흰황해경제벨트는 안보 민감도가 높고, 각 국간 상호보완성보다는 각국 간 경쟁 상황이 지배적이어서 보다 복합적인 양상을 보임
- 2007년 10·4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계획의 재주진



● (접경지역 평화벨트) 시도별로 후보 클러스터를 선정 후 지역주도로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정부는 평가를 통해 우수 거점에 집중 지원

-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북측과 협의를 통해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는 한편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계획(2007년 남북정상회담)
- 남북 간 경제협력을 점(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에서 선(DMZ)으로 확대하는 계획이며, 거점으로서 인천, 속초 이외에 철원이 부상할 가능성이 큼(경원선 남한 중간 기착지)

● (하나의 시장) 남북한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하나의 시장을 형성

- 개성공단 등에서 보듯이 현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요소의 이동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남북한의 경제성장 및 주민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이는 한반도를 점진적으로 단일한 시장으로 형성하자는 것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에서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며, 미래 한반도 단일 경제권 형성을 지향

●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전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의의를 계승하면서도 그 한계를 뛰어넘는 구상으로 해석됨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우리나라 최초로 한반도에 국한된 시각을 벗어난 글로벌 경제영토구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이를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음
 - 그러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기본적으로 선(line)적인 접근 즉 사실상 한반도 철도를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하는 것으로서 북한통과 구간이 막힐 경우 속수무책으로 북한에 대한 의존성이 커짐
 -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면(Area)적인 접근이며, 남북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일본 심지어 미국까지 포용할 수 있는 다자간 접근이며, 협력경로가 특정 국가나 지역에 의존하지 않는 다경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음
-
-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실현될 경우 지난 70여년 지속된 남북분단체제의 일대변혁으로 한반도 국토와 경제 지형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분단 아래 남한과 북한은 상이한 통치체계에서 상이한 발전경로를 걸어 왔으며, 이 분단체제는 정치체제뿐 아니라 국토공간, 경제구조에 구조화되어 있음
 -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실현되어 한반도 경제권이 형성될 경우 이는 분단체제를 주어진 여건으로 해서 진화를 거듭한 충남에도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02

한반도 신경제 구상 관련 주요 동향

-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대외 정책 측면에서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제시되고 있음

- 신북방정책은 2017년 9월 문 대통령이 러시아의 제3차 동방포럼에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러시아와 한국이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을 연계하는 대륙전략임
- 신남방정책은 2017년 11월 문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발표한 것으로,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협력 수준을 끌어올리고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해상전략임

〈 신북방정책 〉

- 유라시아 협력강화 등 대륙전략
- 러시아와 협력 역점 (9개다리)¹⁾
- 중·연안도시와 1일 생활권 구축 (TCR, TSR과 연결)

〈 신남방정책 〉

- 아세안, 인도 관계 강화 해상전략
- 아세안 비중 4국 수준으로 격상
- 인도와도 전략적 공조 강화, 실질 경제 협력 확대

- (신북방정책) 환동해경제벨트와 환서해경제벨트를 매개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계와 경제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UN의 두만강 이니셔티브(Great Tumen Initiative), 몽골의 초원길 등 주변 국가들의 초국경 네트워크 구상과 밀접한 연계가능성이 있음
- 북한의 협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최근 남북경협 논의의 활성화로 인해 북한을 배제한 정책 모색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음. 대표적으로 한중 해저터널, 선박을 이용한 러시아 LNG 수입 등이 있음

1) 지난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은 '5개 협력의 틀'과 '9개 다리 전략'을 제안했음. '5개 협력의 틀'은 △한-EAEU FTA 공동 실무작업반 구성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신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립 △한-러 지방협력포럼 출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설립 등 한국기업 진출 촉진제도 구축이고 '9개 다리'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협력사업이 가능한 주요 분야임.

- (신남방정책) 해상전략으로서 물리적 벨트보다는 국내 거점 논의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 원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의 성격상 협력의 구현체인 교통, 산업협력의 국내거점의 선정이 중요한 개발 사업이 될 전망
 - 현재 논의 중인 국내 거점은 새만금, 목포 등 전라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개발공사 등 정부의 전폭 지원에 힘입어 아세안이나 인도를 겨냥한 협력 거점으로 육성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경협과 별도로 양국 간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한중경제장관회의(2018.2.2.)에서 한중 양국은 신북방 · 신남방정책과 일대일로 구상의 연계 및 제3국 공동 진출, 동북3성 지역에 한 · 중 국제협력시범구, 자유무역시범구 등 주요 거점별 협력방안을 마련키로 합의. 한 · 중 산업협력단지(한국 새만금, 중국 산둥성 엔타이(연태), 장수성 엔청(염성), 광동성 휴이저우 (해주) 개발 및 상호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조성〉

- 중국 국무원이 2016년 26일 발표한 ‘동북지방 등 옛 공업기지 전면진흥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하 의견)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적절한 지역을 선택해 한중 국제협력 시범구를 조성하기로 함
- 한중 FTA 발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은 장쑤(江蘇)성의 엔청(鹽城), 산둥(山東)성의 엔타이(煙臺), 광동(廣東)성의 휴이저우(惠州)를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지정했지만 동북지역에 양국 FTA와 연계한 협력단지를 조성키로 한 것은 처음
- 동북 3성 도시 가운데 한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한 랴오닝성의 성도 선양(沈陽)이나 다롄(大連)이 유력한 후보지가 될 것으로 전해짐. 코트라도 동북 3성에 선양과 다롄 무역관을 두고 있음.
- 러시아와는 극동지역의 개발에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기초하여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등 분야에서 남 · 북러 협력 이외에도 한 · 러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이를 위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4.27 남북정상회담 및 판문점 선언에서 당국 간 협의 이외에도 민간교류 및 왕래가 활성화될 것임을 천명

- 특히 6.15공동 선언 행사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족공동행사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6.15공동선언 이외에 9.15광복절행사, 10.4선언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남북 교류에 참가할 근거 마련됨

- 개발협력 관련하여 동해선과 경의선 등 철도, 도로의 연결사업을 언급하는 등 경협에 강한 의지 드러냄

-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의제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동해선, 경의선 연결이 선언문에 정식 편입
- 대북한제제 완화 또는 해제를 계기로 남북경협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비가 필요

● 문 정부는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남북경협은 평화체제와 경제협력의 선순환구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우발적 국면 경색에 영향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초 위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회 비준, 관련 법제 정비 등 후속조치가 예상됨
- 다만, 아직 통일을 염두에 둔 경제권 구축 방안(국내), 북한의 개혁개방 경로 선택(북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국외) 등 문제에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해야 함

●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일대일로, 신동방정책 등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의 거대 구상과의 연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동아시아 초국경 네트워크’의 형성을 예고함

- 중국 중심의 환황해권 시대가 남쪽(동남아시아, 인도 등)과 북쪽(북한, 동북3성, 연해주)으로 확대되면서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 가능성이 커졌음
- 지금까지 정치·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주요 거대 구상들이 파편적으로 진행되었으나,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는 동아시아 교통 및 경제협력 네트워크가 본격화될 것이 예상됨
- 동아시아 초국경 네트워크 형성은 해양과 대륙의 교량으로서 한반도의 잠재력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충남 등 지역의 글로벌 위상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03

한반도 신경제 구상 관련 충남의 딜레마

-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 뿐 아니라 일대일로, 신동방정책 등 주변국의 거대 구상과 연계 모색은 한반도는 물론 충남의 미래에도 강력한 규정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동아시아의 지역경제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구상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으며, 충남의 지경학적 지위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구조적 변동에 충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가정책이나 글로벌 투자흐름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될 가능성이 크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긴요함
-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관련한 충남은 신경제 구상에서 충남 지위의 모호함, 대외 교역 거점의 미비, 남북경협 경험 적음, 장기적으로 한반도경제권 속 충남 지위의 불확실성 등 문제를 안고 있음
-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서 충남의 지위가 모호하거나 낮음
 - 환동해경제벨트, 접경지역평화벨트 등은 지리적으로 충남과 연관이 크지 않음
 - 환서해경제벨트에서 충남은 제일선에서 벗어나 있으며, 서해를 가로질러 중국과 직접 연결하는 한중 해저 터널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충남은 신남방정책의 거점으로서 설정될 가능성도 크지 않은 상황이며, 새만금 지역이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임
- 충남은 대외 교역 거점이 미비한 상황임
 -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에 따라 대외교역이 원거리교통 중심에서 근거리교통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충남에는 대표적인 항만이나 공항이 발달해 있지 않은 상황임

- 최근 대산항의 한중여객노선 개통, 해미공항의 민항기 운항 논의 등 진전이 있으나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 국가급 교역 거점과 격차가 현격함
- 남북경협 관련 인프라에 있어서도 국가급 항만, 공항의 틈바구니에 있으며, 육상교통에 있어서도 수도권이나 강원도에 비해 북한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음

● 충남은 남북경협사업의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임

- 남북교류가 시작된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기에도 충남 지역 차원의 남북교류 추진경험은 없었으며, 도 의회 감사 때마다 남북협력기금 집행실적 부진은 일상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 종교단체, NGO 등 차원에서 남북교류 또는 지원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역차원이라기보다는 전국차원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함
- 이는 충남의 지정학적 위치를 반영하기도 하나, 충남 자체의 남북교류사업의 절박성이 크지 않음을 반영함

● 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남북경협 본격화 이후 한반도경제권에서 충남의 지위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현재 분단 상황에서 국토공간정책에서 수도권과밀문제 해결은 역대 정부의 제1과제였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 입지 규제, 세종시 건설, 지역 혁신도시 개발 등이 균형발전 정책으로 꾸준히 추진되었으며, 충남은 수도권 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려 왔음
-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경기도내 남북 접경 지역에 신규 투자가 집중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팽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조선, 자동차 등 산업구조조정과 맞물려 충청, 전라, 경상 등 삼남 지방의 경제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할 우려가 있음

● 다만, 남북경협이 상당 기간 충남 경제에 ‘북한특수’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한 것도 사실임

- 남북경협이 북한의 에너지, 교통, 경제개발구(특구 포함) 건설 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경우 국내 3대 중화학 단지(철강, 화학, 기계 등) 중 가장 북단에 위치한 충남의 북부권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음
- 그러나 북한의 개발 관련 중간재의 잠재적 공급자는 한국뿐 아니라 북한,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수도권, 동남권, 광양권 등에서 우월한 항만 인프리를 활용하여 북한특수를 겪날할 것으로 예상되어 낙관할 수 없음
- 이러한 기대를 현실화할 교류협력 거점 및 교통인프라, 북한의 파트너십 등이 긴요한 상황임

04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충남의 전략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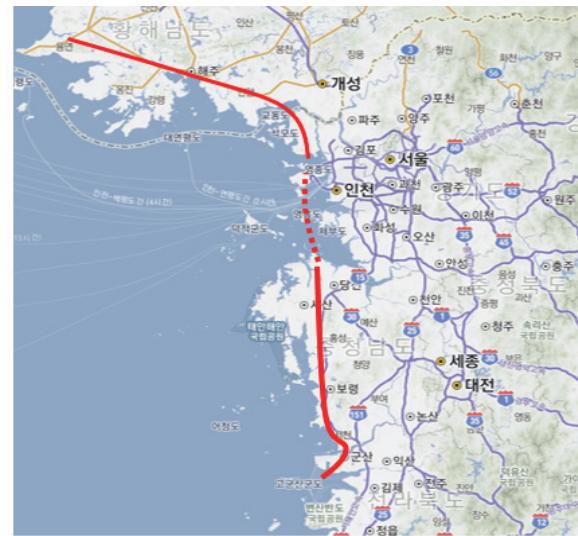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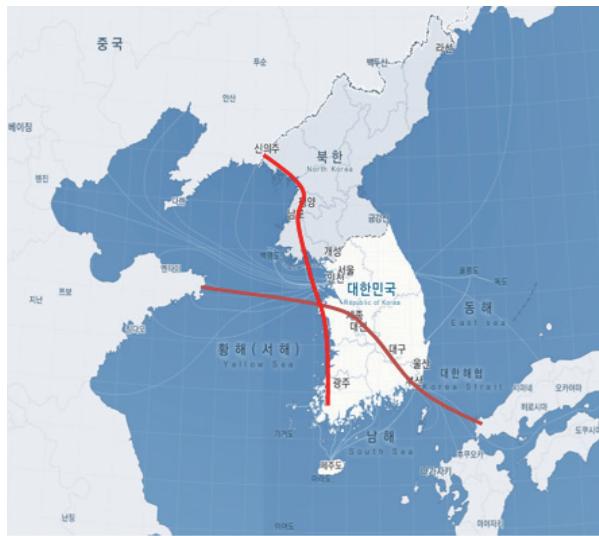
-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관련한 주변국들의 동향은 한반도의 경제지형에 근본적 변혁을 가져올 중차대한 사건으로 충남은 이에 걸맞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
 -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지난 70여 년간 유지된 남북분단체계를 허물고 한반도 경제권을 형성하는 구상을 담고 있으며, 이는 북한은 물론 남한의 국토공간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임
 - 또한 신경제 구상을 매개로 주변국들의 거대 구상이 연계됨에 따라 동아시아 초국경 네트워크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짐. 이는 동아시아 경제지형을 바꿀 것이며, 이는 해양과 대륙의 교량으로서 한반도의 잠재력을 본격적으로 드러낼 것임
 - 이러한 근본적 변혁은 충남에게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위협이므로 전면적, 적극적 대처가 필요함
- 충남은 구조적 환경의 근본적 변동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조응한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함
 -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단지 역대 정부의 남북경협 정책 중 하나로 보기보다는 남북분단체제에서 한반도 경제권으로 전환의 시작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함
 - 또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주변국의 거대 구상이 연계하여 동아시아 초국경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부상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함
 - 과거 구조적 환경이었던 남북분단체제와 동아시아 민족국가 간 대립과 경쟁이 한반도 경제권 형성과 동아시아 초국경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봐야 함
 - 충남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단순히 정부정책 차원으로 파악하고 국책사업화하려는 시각에서 벗어나 거대한 변동에서 미래에 충남의 글로벌 위상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함

- 충남은 단기적으로 우선 대외 교역 거점 구축, 태안반도~인천공항~해주(개성) 해저터널 인프라 건설, 북한과 파트너십 확보에 매진해야 함
 - 한반도 신경제 구상 관련하여 충남은 예상되는 동아시아 초국경 네트워크에서 끝점이 아닌 연결점으로서 중심 지위를 확보해야 함. 즉 해양과 대륙,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을 지향해야 함
 - 이를 위해 대산항, 해미공항, 격렬비열도 등 자원을 활용하여 태안반도를 사통팔달의 동아시아 연결점으로 격상하도록 함
 - 목포~새만금~태안반도~인천공항~해주(개성)~평양~신의주에 이르는 환서해경제벨트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함
 - 북한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안정적인 충남의 남북교류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함

- 충남은 태안반도를 대외 교역 거점으로 구축하여 한반도 신경제 구상 및 동아시아 초국경 네트워크에서 연결점의 지위를 확보해야 함
 - 대산항과 해미공항 등 항만과 공항을 겸비한 우위를 십분 활용하여 기능 특화를 통해 그 지위를 향상 시켜야 함
 - 물류뿐 아니라 보세가공무역지대 또는 자유무역지대를 배후단지로 확보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해야함
 - 한편 보령신항을 국제 크루즈선 기항지로 개발하여 동아시아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도록 함

- 태안반도~인천공항~해주(개성) 서해 해저터널 인프라 건설
 - 남북경협에 수반하는 물류가 교통정체가 심한 수도권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음
 -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환서해벨트를 관통하는 교통망이 필요하며, 수도권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태안반도~인천공항~해주(개성) 구간을 해저터널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음.

※ 해당 구간에는 영흥도, 영종도, 강화도, 교동도 등 섬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고, 평택·당진항, 인천항, 서해안 갯벌 등이 있어 해상교량보다는 해저터널이 타당
 -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해저터널을 자율주행 구간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해저터널은 날씨 등 외부 교란 요인이 적어 자율주행 자동차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



출처: 홍원표, 2040 충남인과 삶터, 2018 제1차 충남미래연구포럼(2018.3.20)

[그림] (좌)한중일 해저터널과 환서해 고속도로, (우)태안반도~인천공항~해주(개성) 해저터널

● 북한과의 지방정부 파트너 확보

- 교류협력 주체의 다원화, 방식의 다양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정부인 충남이 북한의 지방정부와 파트너십을 갖추는 것이 곧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지방정부 차원의 파트너십은 민간 교류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정부의 지방 분권 강화 추세와도 부합함
 - 현재 충남은 황해남도와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황해남도는 북한의 정치경제중심지 평양과 지리적 관계,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1970~1980년대 충남 농촌과 유사), 해안을 끼고 있는 자연생태환경 등에서 충남과 공통점이 많음



(좌) 분단 전 행정구획



(우) 현 북한 행정구획

- 한편 태안반도를 기착점으로 하는 한·중 해저터널 건설은 태안반도를 동아시아 초국경 교통 네트워크의 연결점으로 확립하는 관건임
 - 한반도 남쪽과 중국대륙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은 경의선 철도(또는 고속도로)를 통해 동북3성, 베이징 등 중국의 화북지역과 연결되는 것과는 구분되는 수요가 있음. 상해 중심의 화동지역, 광동성 중심의 화남 지역, 장수성 렌원강에서 출발하여 중국 시안(서안)을 거쳐 중앙아시아로 연결되는 대륙교와 연결되는 노선임
 - 태안반도~산동성 해저터널은 일본에서 부산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가장 최단거리 노선으로서 주변 국가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음. 현재 한·중 해저광케이블은 태안반도에서 중국산동성 칭다오(청도) 구간에 깔려 있음을 상기해야 함.
 - 태안반도~인천공항~해주를 잇는 서해 해저터널과 태안반도~산동성을 잇는 한중 해저터널을 통해 태안반도는 동아시아 초국경 네트워크에서 끝점에서 연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음

05

정책 제언

-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시대 변화에 상응하는 ‘충남의 동아시아 전략’의 공론화 및 수립
 - 한반도 경제권 및 동아시아 초국경 네트워크 형성 등 흐름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동임
 - 이러한 변화의 성격에 걸맞은 담대한 ‘충남의 동아시아 전략’을 준비해야 함
- 큰 그림을 그리는 것과 추진사업 간 균형 추구
 - 남북경협은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급물살을 타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남북교류사업경험이 부족한 충남으로서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과 세부사업 추진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시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충남도의 모든 역량을 발굴하여 큰 그림 그리기와 세부사업 추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충남도는 이러한 두 가지 과제를 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내용적으로 산하 정책기관 및 국책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과제에 대한 해답을 도출해야 함
- 이 3가지 과제 중 북한과의 파트너십 확보와 충남 차원의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은 단기 과제인 반면, 대외 교역거점 구축과 태안반도~해주 간 해저터널은 장기간 과제임
 - 단기 과제는 집중 검토를 통해 수행하도록 하고, 장기 과제는 단계별 접근을 통해 단기에 달성해야 할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함
- 충청남도는 세종시, 대전시 등 충청지역과 협력하여 남북경협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함

- 과거 동일 행정구역에 속했던 충청남도, 대전시, 세종시는 자원의 상호보완성이 크기 때문에 공동으로 남북교류를 추진하면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와 별도로 충남도가 추진할 서해 해저터널, 한중 해저터널 등 구상은 대전시, 세종시 등 충청권 지원 없이는 전국적인 공론화가 불가능하므로 이들과의 협조는 필수적임

홍원표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책임연구원
041-840-1188, wonpio@cni.re.kr

※ 본 글은 충남연구원 2018 전략과제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충남의 전략방향 연구” 및 관련 세미나에서 저자가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임.

참고자료

강희정, 2018, 태안에서 출발하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충남의미래2040: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물코출판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두환, 2018, 남북협력 선발투수 ‘충남’, 『충남의미래2040: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물코출판사

홍원표, 2018, 도시와 농촌이 융합하는 충남, 『충남의미래2040: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물코출판사

홍원표, 2018, ‘남북경협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토론문,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이슈 세미나(2018.5.10),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홍원표, 2018,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충남의 도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도 대응전략 킥오프회의(2018.5.3), 충남도청

홍원표, 2018, 2040 충남인과 삶터, 제1차 충남미래연구포럼 자료집(2018.3.20), 충청남도 · 충남연구원

웹사이트

경향신문 홈페이지, <http://www.khan.co.kr/>

조선일보 홈페이지, <http://www.chosun.com/>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unikorea/>